

거래정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가의 평가는?

“상장폐지 없다… 거래 재개시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

종합적 평가로 상폐 가능성 제한적
빈자리 대안으로 삼성물산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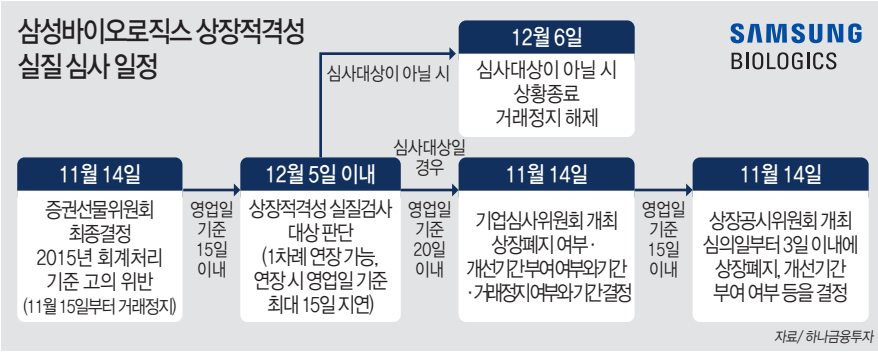
‘삼성바이오, 상장폐지는 제한적’, ‘삼성바이오 거래정지, 투자심리 냉각시킬 여지’...

증권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정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의 방점을 찍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빈자리를 삼성물산이 당분간 채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진흥국 연구원은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최종전(end-game)에 돌입했다’란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수 개월 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 파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며 “거래재개 시에는 불확실성 해소를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 그럴 경우 주주들의 투자손실도 줄어들게 되어 모두가 승자인 게임이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 의결을 앞두고 지난 13, 14일 이틀간 개미들은 삼



성바이오로직스에 베풀었다.

진 연구원은 “우리가 그동안 보고서 등으로 꾸준히 투자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도 ‘결국 상장폐지 안 되면 된다,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였다”며 “그 이유로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의 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고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에도 상장폐지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의 케이스도 예로 든 바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증선위원장이 “한국 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16개 회사가 상장실질심사제도 심사를 받았지만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상장

폐지는 제한적이라는데 무게가 실렸다.

대신증권 홍가해 연구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의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참작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제약바이오 부문으로

옮겨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은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며 “당시만 하더라도 연구개발(R&D) 비용 자산화 처리와 관련된 회계감리 이슈가 잔존해 R&D 자산화 비중이 큰 회사는 상폐 위험성이 존재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9월 19일 금융감독원이 R&D 자산화와 관련된 관리지침을 발표하면서 이 이슈는 완전히 해소됐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로 인한 거래정지가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500대 대표기업에서 제약·바이오 등 건강관리 업종의 시가

총액 비중은 9.2%(약 127조원)에 달하지만 내년 순이익 전망치에서 해당 업종의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이 증권사 김형렬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명령은 국내 증시 투자심리를 극도로 냉각시킬 여지가 있다”며 “산업에 대한 불신이 자칫 국내 증시 전체를 비관하는 상황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내 증시의 저평가가 매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빈자리를 채울 대안으로 삼성물산이 주목받고 있다.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처리 이슈가 삼성물산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및 투자지분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된다면 삼성물산이 대안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예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증선위 결정에 숨죽인 회계법인

“법적대응 없을 듯… 결과 지켜봐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당시 회계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등 처벌수위를 결정했다.

이 같은 증선위 제재에 대해 회계업계는 증선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와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1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에 따른 법적대응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회계 감사에 참여한 삼정KPMG 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5년간 제한과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없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을 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회계업계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당시 금융위의 1년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1심 승소판결을 받아낸 딜로이트안진은 법적 대응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과징금이 따로 없는데다 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없기 때문이다.

딜로이트 안진 소속의 한 회계사는 “대우조선해양 때와 달리 회사 분위기는 조용하다”면서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감사 신규 수임제한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제한이고, 직원에 대한 징계도 없어 굳이 회사가 법적대응을 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삼정KPMG는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합작계약서(JVA) 내용이 감사인 삼정KPMG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삼정KPMG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받은 징계수위는 대우조선해양보다 훨씬 낮지만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영업정지 조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회계감독 판단 어려운 IFRS, 시기상조 지적도

>> 1면 ‘원칙중심 IFRS 왜...’서 계속

한 공인회계사는 “IFRS는 회계처리 판단에 있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다”며 “당국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한 모든 자료와 근거가 무엇인 지 알 수 없는 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와 삼성바이오가 질의한 회계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사실과 상황은 삼성바이오의 기존 회계처리 방향이 맞다고 했을지라도 증선위에 제시된 사실과 상황은 반대의 방향이 맞다고 할 수 있다”며 “IFRS를 적

용하는 환경이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원칙 중심의 IFRS 도입이 한국에 도입된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한 공인회계사는 “어떤 회계기준을 선택했는지를 떠나 회계처리나 판단의 주체는 기업이며, 감사인은 절차가 제대로 됐지만 봐야하는데 이번 삼성바이오 사태를 보면 감사인이 회계처리의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IFRS 도입 전에 기업이나 감사인들의 인식이 선진화가 먼저 이뤄져야 했다”고 역설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롯데건설

롯데캐슬이 새롭게 진화하면
당신의 생활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의 품격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라이프스타일의 행복한 변화를 가져다 줄
롯데캐슬의 전혀 새로운 진화

이제, 당신이 직접 누리실 차례입니다

NEXT CASTLE